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동맹정책

신 성 호
서울대학교

2009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09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동맹정책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8년의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 이어 2009년 새로이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예고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자유의 확산이라는 이상주의를 추구한 부시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전 행정부와의 전적인 결별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향후 펼쳐질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비판하고 이라크에서의 조속한 철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가 자유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미국 외교의 기본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바마는 선거 중 발표한 그의 외교안보구상에서 미국의 지도력 쇄신을 가장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 쇄신하겠다는 오바마의 목표는 2차 대전이후 세계의 패권국가로 군림해온 미국 외교의 변함없는 이해와 목표를 반영한다. 그러나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성을 강조한다. 공격적이고 일방주의 외교로 비판을 받은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는 불필요한 우방과의 마찰을 피하고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회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해결, 국제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 등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Obama 2007). 그러나 오바마의 새로운 접근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이 가지는 변화와 연속성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조명코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와 연속성이 한국정부가 21세기에 함께할 동맹으로 제시한 한미 "전략동맹"에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코자한다.

II.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동맹정책

1. 오바마와 아시아, 그리고 경제위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첫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은 유년시절을 아시아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오바마는 고등학교까지의 하와이 시절 중 6살 때인 1967년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1971년까지 롤로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계부와 함께 자카르타의 서민촌에서 생활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오바마에게 미국 바깥세계, 특히 아시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당선이전 오바마가 쓴 두 개의 저서에서 묘사하는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경험은 일반 미국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통찰력과 풍부한 이해력을 보여준다(Obama 2004, 28-52; 2006, 271-276). 이러한 오바마의 경험은 초강대국 미국바깥 세계의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미국이 처한 국내외적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미국이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강대국의 면모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모든 이의 질시와 경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미국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이제껏 대서양 건너 유럽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대통령 오바마가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오바마가 청소년기를 보낸 하와이 역시 백인 보다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각종 동남아시아 인등 아시아계 유색인종이 하와이 원주민과 더불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의 개인적 성장 경험과 배경은 향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은 현재 미국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테러와의 전쟁에 비해 그 중요성이 당장은 떨어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주 관심은 경제위기 극복에 맞추어져 있다. 10 퍼센트에 육박하는 실업률, 주택가치의 폭락과 불경기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세계 최고의 수익률과 경쟁력을 내세워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가던 금융산업의 끝을 알 수 없는 부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3개 대표주자의 몰락 등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많은 위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1929년의 대공황 혹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치명적인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8천억불이 넘는 금융구제안을 취임직후 발표하였고, 미국의 가장 큰 부동산 담보대출 회사인 프레미 맥Freddie Mac과 패니메이Fannie Mae는 물론 AIG, 시티은행과 같은 미국 최고의 민간 금융회사가 현실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동시에 이번 금융위기로 제기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구하기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의회연설은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의료보험, 에너지, 환경, 그리고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New York Times* 2009).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수십년간 논란속에 미루어온 의료보험 개혁과 온실가스 제한 등 산적한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당분간 외교안보문제 자체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견한다. 매일 매일 터져 나오는 각종 경제하락 지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행권과 대기업의 새로운 부실 가능성, 의료보험 등 정부의 각종 개혁안과 예산을 둘러싼 의회와의 복잡하고 힘겨운 줄다리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 논쟁과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스캔들을 대응해야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최고의 힘과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운명은 다양한 국제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겨준다. 지속되는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부상이나 러시아의 견제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 외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 관리, 에너지, 환경문제 및 빈곤 퇴치와 인권 문제 등 실로 미국에게 안겨진 외교 안보 과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문제는 미국이 복잡한 바깥 세계의 문제들을 과거와 같이 주도적으로 다룰 만한 시간과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위기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패권의 쇠퇴에 대한 경고는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1] 비록 국내 경제문제 해결이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중요 현안이 될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을 지닌 미국은 밖으로부터의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아시아 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미국의 세계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2.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및 동맹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에 종속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경기 부양과 의료, 환경, 에너지 분야의 광범위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라크 철군과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중심한 테러와의 전쟁은 여전히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은 불필요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과중한 군사비 지출을 초래 하였고, 이는 미국의 장기적 국력 손실은 물론 당장의 경제회복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가 불필요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정작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인 아프카니스탄 사태 안정에 소홀한 실수를 범하였다고 판단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사태를 하루 빨리 안정화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에 집중코자 한다. 현재 이라크 사태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군사증원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지속되는 반란세력의 테러 공격 속에 이라크 내부의 시아파, 수니파 및 쿠르드 부족 간에 평화로운 연합정부의 수립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선거기간 중 조속한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는 당선이후 이라크 정국안정의 진전에 따라 철군계획이 변경될 수 도 있음을 시사 하였다. 여기에 탈레반 세력의 재확산으로 인해 알케이다 소탕 등의 군사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중동과 서남아시아를 중심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회복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집중될 오바마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보일 것이다. 집권 초기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던 부시 행정부는 후반에 가면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부르면서 새로운 협조관계를 추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북핵과 6자회담, 양안관계의 안정적 관리, 동북아등 동아시아의 다자적 안보협력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현실적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이 촉구된다(Hachigian, Schiffer, and Chen 2008). 한편 장기적으로 부상하는 아시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무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 차관보 커트 캠블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의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매몰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전 세계 구상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할 것을 역설하였다. 캠블에 의해 *i*아시아로 정의된 아시아는 미국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은 아시아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호협력 할 것이 요구된다(Campbell, Patel, and Singh 2008).[2]

3. 중국의 부상

부상하는 중국은 미국 아시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경쟁자로 대하기보다는 아시아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담보하는 공동의 관리자 내지는 동반자로 접근한다. 비록 중국의 체제가 미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아닐 지라도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적대시하기보다 함께 협조해야 할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이미 부상의 단계를 지난

강대국이며 지구적 차원을 문제를 해결함에서 미국이 협력해야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The White House 2009a). 이는 초기의 부정적, 경쟁적 입장에서 점차로 중국을 국제정치의 책임있는 대주주 혹은 이해 상관자로 인정한 후기 부시행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부시나 클린턴 행정부들이 처음에는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관계로 접근하면서 초기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출발하여 불필요한 과도기와 조정의 시기를 거쳤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행태를 보였다. 오바마는 이전 행정부가 겪은 중국과의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근하고 전향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여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협력하는 건설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긍정적positive, 협력적cooperative, 그리고 전면적comprehensive" 관계를 추구할 것을 천명한다(The White House 2009b).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재보증"strategic reassurance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달러와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향적 중국정책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약 2조달러 규모의 세계 최고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정부의 금융 및 경제 정책은 특히 그 중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와 맞물려 미국의 경제회복 노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이 보유한 달러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달러화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및 경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이미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이자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중국의 내수 진작과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강조된다(Clinton 2009a).[3] 2009년 4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런던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향후 경제장관뿐 아니라 양국의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전략 대화를 열 것을 합의하였다. 오바마는 중국이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6자회담, 이란 핵문제,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상황과 같이 미국이 당면한 외교현안문제를 푸는데 협조함과 동시에 테러리즘, 비확산문제, 질병, 자연재해, 해적 문제 등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의 비전통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중국과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White House, 2009f). 동시에 중국이 G2라고도 불리운 G20개국 런던 금융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회의는 물론 유엔안보리와 같은 전통 국제기구나 협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과 같은 국제조직이나 기구에서 책임과 위상에 상응하는 지분을 더 허용할

것도 고려한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문제를 유화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천명한다.

물론 오바마가 중국을 무조건 적인 동반자로만 규정하지는 않는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여전히 미국의 경계대상이다. 오바마의 기본 군사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고, 아태지역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천명한다(Obama and Biden 2007). 대만문제 역시 언제든 미중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뇌관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의 유사시 대만 침공에 대한 방어를 약속한 대만 관계법 역시 여전히 중시한다. 그 밖에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만큼 중국이 또한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여 중국이 현재 다푸르 지역에서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단과 같은 억압적 정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또한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과거의 전례를 보아 전통적으로 중국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중국의 인권문제 등이 양국 간 심각한 갈등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경제문제에서도 경제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오바마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및 저환율 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4. 아시아의 역사적 동맹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 추구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의 역사적 동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한다. 일본은 아시아 동맹국 중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이전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은 부시와 고이즈미 행정부의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민주주의 가치 확산, 중국의 부상 경계 등 미국 아시아 동맹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일본이 민주주의, 법치, 인권, 자유시장 등 미국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동맹임을 강조한다. 일본과의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초석이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Clinton 2009b). 동시에 오바마는 일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한국을 위시한 여타 아시아 동맹국의 중요성과 역할을 함께 강조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균형전략을 반영한다. 이전 부시 행정부의 아시아 동맹정책은 고이즈미와 그의 뒤를 있는 보수 성향 지도자들의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자유확산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나치게 일본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펴는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이외에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여타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지역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협력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미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호주는 물론 한국을 위시한 다른 동맹국들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지역안보 현안 및 테러와의 전쟁 등에 이들 나름의 기여를 더욱 촉진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퍼진 반미 감정을 불식하고 미국의 연성권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교두보로 삼는다. 그리고 이들과의 동맹결속은 중국의 부상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데에도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5. 새로운 협력관계 추구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 증진,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동맹 강화에 덧붙여 오바마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기존 동맹외에도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종 지역현안 및 테러와의 전쟁, 지구적 문제 해결에 참여를 유도한다.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폭넓은 동반자관계 구축은 오바마가 추구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인도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는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에 이어 제3단계의 협력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정의되며 이를 위해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 및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도 함께 협력하는 전면적 협력관계를 추구한다(Steinberg 2009).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 수립을 추구한다. 아시아에서 양자합의나, 이따금씩 있는 정상회의, 임시적인 장치를 넘어서는 보다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09c). 이것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 형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나 아시아 및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다룰 수 있는 영구적인 다자협력기구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양자동맹 중심의 미국의 대아시아 동맹전략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양자동맹을 여전히 미국 동맹전략의 축으로 삼을 것이지만, 다자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양자 동맹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북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형태의 3자 모임을 거론하면서 미 · 중 · 일간의 새로운 3각 협력체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기도 하였다.[4]

III.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1. 한미 "전략"동맹의 역할

시급한 경제 현안과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알케이다 및 탈레반 세력의 소탕 등에 소진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한반도가 가지는 정책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다. 북한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밝힌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역시 대중국 정책과 마찬가지로 후기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계승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미간에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조정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동맹 재조정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동성에 대한 오바마의 기본 입장은 부시 행정부와 동일하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로 연간 100억불의 전쟁비용을 아낌으로써 많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오바마의 입장은 한국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용을 축소하려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2009년 4월 런던 20개국 회의 중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 미군 감축을 28,500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의를 계승하기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이 스스로 더욱 많은 방위책임을 질 것과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본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여타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안보 이해를 추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전략적 유동성 역시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격상과 한국군이 한국방위 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큰 지지와 기대를 보일 것이다(The White House 2009d).[5] 특히 날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안정화 및 재건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The White House 2009e).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이라크에서의 조속한 철군과 함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에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동시에 아프카니스탄 문제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 전 세계의 공통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동맹과 세계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4월의 런던 20개국 정상직후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60주년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 증편과 더불어 나토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여 회원국들로부터 5,000명의 추가 파병을 약속받았다. 현재 탈레반 세력이 다시 재결집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여름에는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 국경내의 스와트Swat주와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50 Km 떨어진 부네를 주까지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알케이다Al-Qaeda와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이 바로 이 지역근처에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Taliban이 파키스탄의 일부라도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특히,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70에서 100개의 핵무기가 탈레반과 알케이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2009년 가을 아프칸 대선이 부정 선거로 얼룩지고 현지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지역에 약 3만여명의 미군을 증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아프칸 주둔 미군은 부시 행정부 말기 5만명 미만에서 두 배가 넘는 10만명으로 늘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오바마 정부에게는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과 같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문제는 베트남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미국안보에 사활이 걸린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 지역의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에 대해서는 전투병 파병은 아닐지라도 경찰훈련교육, 민간재건 인력투입, 재건사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모든 가능한 형태의 재건과 안정화 노력에 동참할 것이 미국 행정부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다.

2. 북핵문제

오바마는 북한의 비민주성을 인정하면서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목표달성을 위해 북한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을 주장한다. 오바마는 2008년 합의된 북한의 검증수용을 "알맞은 진전"a modest step forward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appropriate respons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중앙일보〉 2008/10/12). 출범 초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북미관계 정상화와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북미협상과 6자회담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2차 핵 시험으로 인해 북미 관계는 다시금 급속히 얼어 붙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이중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초기 오바마의 유화적 태도를 오판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책을 초래한 결과로 분석된다. 오바마가 후보시절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과 테러분자들에 대한 강력한 소탕 작전을 벌일 것을 주장한 것과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필요하다면 파키스탄 정부의 동의 없이도 이에 대한 직접공격을 단호히 할 것을 천명한 점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도 단호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특히, 오마바의 핵테러 방지와 핵 없는 세계 정책은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당면한 한반도 관련 외교현안 문제에 새로운 접근을 예고한다. 먼저 북핵문제에서 오바마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도 북핵의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강한 수사와 외교적 노

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미국의 북핵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표류했다고 오바마는 파악한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진행된 2차 북핵 위기동안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동결된 핵 무기프로그램을 재가동하여 핵물질을 추가로 생산하였고, 급기야 2006년에는 핵실험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후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불능화,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 일련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북핵의 궁극적 폐기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바마는 선거 기간 중 이란과 북한을 들어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직접대화를 거부한 이들 지도자와 핵폐기를 위한 직접협상을 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자신의 과감한 접근이 이들에 대한 양보로 해석되는 것을 의식하여 핵폐기를 위한 강력한 외교tough diplomacy를 추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바마의 북핵 정책에 관여한 한 인사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협상은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 정책의 연장이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비록 북핵 폐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6]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포괄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핵포기 여부에 대한 보상과 처벌 의지를 동시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북핵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잘 보여 준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 북한과의 6자회담 및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노력은 지속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Bosworth 2009).[8] 이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3개 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유엔이 이를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미사일 발사, 핵개발 재가동, 제2의 핵실험과 우라늄 프로그램 등의 시작 등을 위협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 국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더욱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절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급기야 북한이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자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의 제제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미북 양자 협상 요구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세 번 똑같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대화는 지속하더라도 북한이 핵 폐기의 성의를 먼저 보이지 않는 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2009년 12월 5월의 2차 핵 실험 이후 처음으로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였으나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당분간 미북간 북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모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의 냉각기를

거쳐 북한이 오바마 정부와 전격적인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측된다. 만약 북한이 궁극적으로 오바마의 대담한 제안을 받아들여 핵폐기에 성의를 보인다면 북미관계와 한반도는 정상화와 평화조약 체결 등 급진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더 큰 보상을 바라고 협상을 지연하거나 일부에서 우려하듯 핵 군축을 주장할 경우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3. 한미 FTA

한국정부입장에서 한미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비준 문제이다. 선거 당시 한미 FTA 관해 오바마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메케인에 비해 반대 혹은 유보의 입장을 취하였다. 오바마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인 국내 노동자의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 비록 자유무역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외국과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현재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최소한 한미 FTA가 그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쌀, 소고기 부분과 환경보호, 노동조건 등에 대해 어느 정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견지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과의 재협상 논란이 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기 등 미국내 경제위기로 인해 당분간 한미 FTA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향후 비준과 관련한 재협상에 관해서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마다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Clinton 2009b).[9] 비록 2009년 4월의 런던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그 구체적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향후 미국 경제위기의 진행 상황과 내부의 정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 지 가늠하기 힘들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 한미FTA를 비준하려 한다면 한국의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재건지원이 미국 의회를 설득하려는 한미 양국 정부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미사일 방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에 대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이다. 오바마는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테러리즘과 더불어 대량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의 확산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는 그가 이미 상원의원 시절부터 공화당의 루거 상원위원과 더불어 러시아의 핵 시설과 무기들을 제거 및 통제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과도 연결된다.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는 차기 정부의 가장 주요한 안보정책이 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PSI가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이다. 오바마는 PSI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PSI를 출범시키면서 그 성격에 대해 어디까지나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행동지침이지 조약이나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The U.S. Department of State 2005). 이는 PSI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강제검문이나 차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완화하고 되도록 많은 국가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나온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처음 창설시 유럽의 주요 동맹국과 일본 등 10여개 핵심참가국으로 시작된 PSI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와 지지의사를 밝히고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들어 실질적으로 PSI의 8가지 활동 중 5개를 수행하면서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정식참여를 유보해 왔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PSI를 제도화 할 것을 밝히고 있다(The U.S. Office of the President Elect 2009). 이는 테러범들에게 핵 물질이 이용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오바마에게 핵 물질의 제거 노력과 함께 최후단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및 이와 관련된 운송수단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 유엔결의안 1540 등을 들어 PSI 를 NPT나 생화학무기수출금지협약과 같은 보다 정식의 국제조약이나 기구로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PSI 정시가입을 선언하자 미국정부는 즉각 이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오바마의 핵비확산 노력은 소련과의 전략핵무기 감축노력, 핵비확산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NPT) 강화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차 한미간에 있을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양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처리 요구가 핵무기 제조 능역의 확산을 막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세심한 준비와 조율이 요구된다.

부시 행정부가 심혈일 기울인 미사일 방어에 대해 오바마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다. 선거 중 오바마는 국방정책의 하나로 미사일 방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관련된 기술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증명될 때 까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른 국방정책의 우선순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증적이고 비용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지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Obama 2008). 이는 결국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한 미사일 방어의 상대적 중요성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당히 약화내지는 거의 소멸될 것을 예상케 한다. 실제 많은 핵 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가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기술적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여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사일 방어

가 강대국간 핵억제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핵경쟁과 핵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안보딜레마를 초래한다는 것이다(Waltz 2004, 347-352). 이러한 현실주의자들의 비판과 아울러 핵테러의 입장에서 핵미사일을 이용한 핵테러가 그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테러전문가들은 핵테러의 경우 소규모의 핵폭탄을 밀반입하거나 더러운 핵무기 등을 사용한 핵 테러의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오바마 입장에서 현실적인 위협가능성이 적은 핵미사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그 기술적 실효성이 의심되고 전략적 위험성까지 초래할 미사일 방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판단이다. 이러한 오바마의 결론은 미사일 방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문제로 인한 미중의 갈등 속에 어려운 입장에 있던 한국정부의 입지도 개선될 것이다.

IV. 맺는말

부시 행정부의 외교 및 동맹정책이 이상주의, 일방주의, 경성권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오바마의 새로운 접근은 현실주의와 실용적 접근, 다자외교와 국제기구의 강조, 외교를 통한 연성권력의 활용과 스마트 파워의 추구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제난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전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혹자는 과거 부시 행정부의 과도한 일방주의와는 정반대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표출될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정치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서 미국의 지도력 쇄신이라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오바마는 미국이 경제난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 에너지, 빈곤, 인권 문제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시한다. 향후 오바마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오바마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 이전 행정부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미국의 외교 및 동맹전략도 보다 복합적으로 추구된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통적인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서 탈피하여 균형력power of balance을 강조한다. 복잡다양한 문제와 주체들을 다루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 역시 어느 한 사안이나 수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아 이 모든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역시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보다 복잡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양자와 각자 경제 및 군사 안보 이해를 동시에 공유하는 한국의 입지도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간의 협력과 함께 미사일 방어 등 중국을 자극하던 미국의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중간의 협력도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한일 갈등에 관하여는 오바마에게 일본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될 것이나 한국에 대한 상대적 배려가 강화됨에 따라 일본의 보다 조심스런 자세와 현재 북핵 및 한일관계에서 보여 지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한국의 대미국, 대북 및 주변국 외교에서 미국과의 정책공조가 보다 원활해지면서 한국이 더욱 유연한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러한 유연한 정책은 동시에 한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기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잘 투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미북관계가 새로운 위기국면에 진입할 경우 오바마의 강경책을 어떻게 대처할 지도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오바마가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와 한미 동맹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새로운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전략동맹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지도 당면한 과제이다. 과거 1990년대 미일 동맹이 초반의 위기를 거쳐 중반이후 새로운 안보공동선언과 함께 일본의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역할이 강조된 선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21세기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한 우리의 비젼과 선택이 요구된다.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전략동맹"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함께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진 21세기 아시아의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ampbell, et. al. 2009).[10]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현안들에서부터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물론 새로이 시작될 북핵 협상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위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나, 한미간의 갈등, 한국내의 남남갈등이 부각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012년에 예정된 전시 작전권 이양과 용산기지 이전 역시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은 물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둘러싼 양국의 정치 쟁점화와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행정부의 지혜와 긴밀한 협력 또한 중요하다. 양국 정부는 단기 현안들을 다루는 속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와 핵협상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통일문제 등 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구체적인 대화와 준비를 시작하여 21세기에 새로운 복합동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Clinton 2009c).[11] ■

주(註)

[1] 미국 유일패권의 쇠퇴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 Zakaria (2008); Haas (2008).

[2] 캠블에 의하면 아시아는 *i*로 시작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특성을 지닌다. 첫 번째는 부상하는 아시아로 무역, 문화, 안보 등에서 통합integration이 가속화되고, 금융, 나노, 환경분야의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간산업과 인적자원 개발에 과감한 투자investment가 세가지 주요한 특성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아시아로 강대국간 군비경쟁, 역사, 영토분쟁으로 인한 불안insecurity과, 환경오염, 극단주의 마약, 무기 밀매 및 인신매매가 횡횡하는 불안정instability, 그리고 내외적인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한 불평등inequality의 세 가지 특성이 또한 존재한다.

[3]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증언하였다.

[4] 2009년 4월 북경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제회의 녹취.

[5] 런던 20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 대면한 오바마는 한국을 가장 가까운 동맹, 그리고 가장 위대한 친구로 표현하였다.

[6] 워싱턴의 Brookings Institute에서 가진 인터뷰.

[7] Ibid.

[8] 스티븐 보스워스 북핵 특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비록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9] 힐러리 국무장관은 최근 한 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무역에 관한 한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을 확장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답변하였다.

[10]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차관보 Kurt Campbell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평화헌법에 외국에서의 군사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같은 조건의 호주에 비해서는 일반군사력과 해외투사 군사 잠재력이 월등하고, 재부의 경제,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 태국이나 필리핀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수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11] 지난 2월 첫 해외순방으로 방한한 힐러리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 권력이양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과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8. 10월 12일.

Obama, Barack and Joe Biden. 2007. "Protecting U.S. Interests and Advancing American Value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Available at http://www.barackobama.com/.

Bosworth, Ambassador Stephen W. 2009.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U.S. Department of State "U.S. Policy Regarding North Korea" April 3. Available at http://fpc.state.gov/121278.htm(검색일 : 2009. 4. 3).

Campbell, Kurt M., Nirav Patel, and Vikram Singh. 2008.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i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linton, Hillary Rodham. 2009a.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U.S.A. January 13.

_____. 2009b. "U.S. and Asia: Two Transatlantic and Transpacific Powers," Remarks at the Asia Society, New York. U.S.A. February 13. Available at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검색일 : 2009. 2. 16).

_____. 2009c. "Putting the Elements of Smart Power into Practice," En Route Seoul, South Korea. February 19. Available at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9411.htm(검색일 : 2009. 2. 20).

Haas, Richard N. 2008. "The Age of Nonpolarity." *Foreign Affairs* Vol.87, No.3(May/June): 44-56.

Hachigian, Nina., Michael Schiffer, and Winny Chen. 2008. *A Global Imperative: A Progressive Approach to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vailable at http://www.americanprogress.org/.

Kurt M. Campbell, Victor D. Cha, Lindsey Ford, Nirav Patel, Randy Schriver, Vikram J. Singh, Kazuyo Kato. *Going Global: The Future of US-South Korea Alliance.*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rity. Available at http://www.cnas.org/files/documents/publications/CampbellPatel_Going%20Global_February09_0.pdf(검색일: 2009. 3. 2).

Obama,Barack. 2004. *Dreams from My Father*. New York: Three Rivers Press,

_____. 2006. *The Audacity of Hope.* New York: Three Rivers Press.

_____. 2007.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July/August).

_____. 2008. "A 21st Century Military for America." Available at http://www.barackobama.com/issues/(검색일 : 2008년 9월20일).

New York Times. 2009. "President Obama's Address to Congress." February 24.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09/02/24/us/politics/24obama-text.html?_r=1(검색일 : 2009. 2. 25).

Steinberg, James. 2009. "Remarks on India." Remarks by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U.S.A. March 23. Available at http://www.state.gov/s/d/2009/120856.htm(검색일 : 2009. 4. 5).

The U.S. Department of State. 2005. "PSI Frequently Asked Questions." Available at http://fas.org/irp/news/2005/01/psi011105.html(검색일 : 2008. 11. 30).

The U.S. Office of the President Elect, "The Obama-Biden Plan: Homeland Securit" Available at http://change.gov/agenda/homeland_security_agenda/(검색일 : 2009. 3. 4).

The White House. 2009a.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JINTAU OF CHINA BEFORE MEETING," April, 1.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Obama-and-President-Hu-of-China-before-Meeting/(검색일 : 2009. 4. 3).

_____. 2009b. "Statment on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Hu of China," April. 1.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Statement-On-Bilateral-Meeting-With-President-Hu-Of-China/(검색일 : 2009. 4. 3).

_____. 2009c. "The Agenda: Foreign Policy."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issues/foreign-policy/(검색일 : 2009. 3. 30).

_____. 2009d. "REMARKS BY PRESIDENT OBAMA BEFORE MEETING WITH PRESI-

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April 2.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President-Obama-before-Meeting-with-President-Lee-Myung-Bak-of-the-Republic-of-Korea/(검색일 : 2009. 4. 3).

_____. 2009e. "BACKGROUND READOUT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TO THE TRAVEL POOL ON THE PRESIDENT'S MEETING WITH PRESIDENT LEE OF THE REPUBLIC OF KOREA," April 2.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Background-Readout-By-Senior-Administration-Officals-To-The-Travel-Pool-On-The-Presidents-Meeting-With-President-Lee-Of-The-Republic-Of-Korea/(검색일 : 2009. 4. 3).

_____. 2009f . "US-China Joint Statement." Beijing. China. November 17. Available at http://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검색일 : 2009. 12. 20).

Waltz, Kenneth N. 2004. "Missile Defense and the Multiplic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 ed.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347-352.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Zakaria, Fareed. 2008.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87, No.3(May/June): 18-43.

필자약력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성호 교수는 미국 터프츠 대학 플레쳐 스쿨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East West Center 객원연구원등을 역임하였다. 연구관심은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Demographic Peace: Rapid Aging and Its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n Arms Rivarly", "The ROK-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A Smart Alliance in the Age of Complexity", "핵 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 부시와 오바마"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100-786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